

토론회 ①

소상공인, 코로나로 30% 넘게 영업이익 감소

경사노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와 대응」 토론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4.26.(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특히 소상공인계층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에 위원회는 소상공인계층의 위기현황을 진단하고, 그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한 취지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 자금난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맘 흘러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현황을 진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생 돌파구를 찾자”고 말했다.

경사노위 소상공인위원회 임원배 위원장은 “이번 소상공인 위기는 방역조치와 지원체계를 포함한 정부차원의 대응체계 부족에서 가속됐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취약한 사회안전망이 구조적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한꺼번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정책제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토론회① | 01-02

소상공인, 코로나로 30% 넘게 영업이익 감소 : 경사노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와 대응」 토론회 개최

| 토론회② | 02-03

코로나19, 청년고용 대책 진단 및 제언 : Lock down 세대, 방치할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

| 국제활동① | 04-05

「노동시장에서의 청년」 한-러 웨비나 : 청년고용은 전 세계 공통과제, 한-러 공조 강화와 사회적 대화 역할 공감대

| 국제활동② | 05-07

위원회,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국제노동기구(ILO)간 웨비나’ 참석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세계 사회적 대화의 역할에 공감

| 위원회 단신 | 07-08

관광산업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



기조발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전후 소상공인들의 평균 영업이익은 35.6%, 매출액은 25.9%로 감소했다”며, “소상공인이 전체 기업의 93.3%를 차지하는 국민 경제의 근간인만큼 이들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의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임 교수는 “정부 지원을 ‘생존지원’→‘피해보상’→‘영업활성화 단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1단계는 자금 지원과 경기회복까지 생존 지원을, 2단계는 전·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에 중점을, 3단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보편적 재난지원금·소비쿠폰·지역상품권 등 경기회복 및 소비진작 대책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 연구실장과 이종현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각각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윤형 실장은 감염병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관한 주제발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시 소상공인의 지역별·상권별·업종별 영업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있어 손실항목 선정, 소급 적용 여부 및 재원 마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

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도매물류기능 공적체제 강화를 꼽으며, 노란우산 공제 등을 통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장권력이 제조에서 도소매로 옮겨 온 만큼, 지역 상권 내 소상공인의 협력·조직화, 공유유통 체계의 업종별 다양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 공공 연계망 강화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권순중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과 전문가 4명(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구센터장)이 참가하여, 거리두기 방역지침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sic**

김명환 전문위원



토론회 ②

코로나19, 청년고용 대책 진단 및 제언: Lock down 세대, 방치할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유니온과 함께 「코로나19, 청년고용 대책 진단 및 제언: Lock down 세대, 방치할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 토론회를 4.27.(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청년의 관점에서 그 규모와 방향이 고용대책으로 충분한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첫 발제는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맡아 ‘고용지표와 구직자 실태조사를 통해 본 청년 고용위기의 현재’를 진단했다.



김영민 사무처장은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양적 증가는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고용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단순노무종사자

< 고용 동향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연령대별 고용동향	2021.2					2021.3					2020.2 대비 증감
	인구	취업자	고용률	증감		인구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 전체 >	44,987	26,365	58.6	-473	-1.4p	45,007	26,923	59.8	314	0.3p	+85
15~29세	8,841	3,715	42.0	-142	-0.9p	8,826	3,818	43.3	148	2.3p	-39
30~39세	7,035	5,263	74.8	-238	-1.7p	7,022	5,238	74.6	-170	-0.8p	-263
60세이상	12,377	4,908	39.7	+212	-0.4p	12,433	5,256	42.3	408	1.1p	+560

직종별 고용동향	2021.2			2021.3				2020.2 대비 증감
	구성비	증감	증감률	구성비	증감	증감률		
< 전체 >	26,365	100.0	-473	26,923	100.0	314	1.2	85
서비스종사자	2,942	11.2	-248	2,981	11.1	-60	-2.0	-210
판매종사자	2,774	10.5	-196	2,771	10.3	-123	-4.2	-200
단순노무종사자	3,660	13.9	157	3,911	14.5	416	11.9	408

*출처 : 통계청

40만 명가량 증가했고 고용이 증가한 연령층도 고령층과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진단이다. 김 사무처장은 “청년층의 고용이 양적으로는 유지가 되더라도, 노동시장에서의 생애주기를 감안하면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처장은 대안으로 코로나19로 청년 구직자의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현재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 일자리 사업’, ‘청년 수당형 사업’ 등의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청년 세대 내에서도 특히 취약한 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희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청년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시행 방향’이란 주제로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논의와 해외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의 시행 방향에 대해 ‘첫째, 직접일자리 사업의 질적 보장을 위한 개선 및 보완 노력, 둘째, 일을 하면서 자기학습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교육훈련 요소 가미, 셋째, 중간 지원체계에 대한 디테일한 재설계, 넷째, 직접일자리로 인한 미래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상현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대표,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이지영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기획과장이 ‘청년고용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현 대표는 정부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 ‘고졸 청년’을 별도로 언급하여 이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마련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졸 청년을 위한 대책으로 ‘실무역량 갖출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수준 강화’와 ‘충분한 취업역량 갖출 수 있는 지원’, ‘취업 준비 기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정책, 고용서비스의 전달이 각 지역에서 고졸 청년에게 적합한 형태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권 소장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주로 60대 이상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청년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청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대책과 제언을 바탕으로 청년고용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eslc](#)

신수정 전문위원



국제활동 ①

「노동시장에서의 청년」 한-러 웨비나

청년고용은 전 세계 공통과제, 한-러 공조 강화와 사회적 대화 역할 공감대

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을 주제로 러시아 ‘시빅챔버연합’과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만남은 러시아 시빅챔버연합이 작년 12월에 개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글로벌 경험과 러시아를 위한 대안’ 국제 컨퍼런스에서 양 기관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당시 문성현 위원장과 리디아 미키히바(Lydia Mikheeva) 위원장은 면담에서 앞으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경험 공유와 발전방안을 모색하자는데 뜻을 모았고, 이후 양 기관은 공동 컨퍼런스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문성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청년 문제는 전 세대가 고민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로 청년들의 무한한 경쟁력과 혁신의 DNA가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대화를 만나 청년들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디아 미키히바 위원장은 “청년이라는 주제는 한러 관계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앞으로도 공동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만남처럼 사회적인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나눈다면 양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발제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청년노동시장 및 청년노동조건의 특징을 짚고 작년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 위원은 이어 실업극복,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부분에서의 지원 사업(26개)과 청년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90여개) 등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고용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정부를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코로나 19 위기 능력개발 극복’, ‘양질의 일자리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법으로 보장

한국, 청년이 직접 사회적 대화에 참여

경사노위 산하 청년위원회 정보영 위원장은 작년 8월에 발족된 청년위원회를 소개하고, 청년위원회 출범으로 사회적 대화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독자적인 의제를 개



발하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청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발굴과 정책제안활동, 특히 지역공론장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시빅챔버연합 ‘경제및기업사회적책임개발위원회’ 올가(Olga) 부위원장은 러시아에서도 최근 청년정책법안이 시행되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 최초로 ‘젊은 전문가’*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올가 부위원장은 “러시아의 젊은 전문가들은 대학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직무와의 미스매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국 측 사례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가 부위원장은 향후 개최 될 ‘동방경제포럼’, ‘상트경제포럼’, ‘보스토크청년교육포럼’ 등의 국제행사에서 청년을 주제로 한 공동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 젊은 전문가: 35살 미만의 러시아연방국민으로 대학교 및 유관기관을 졸업하고 관련직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자로 사회에서 처음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현 러시아연방 청년인구수 4,100만명, 이들 중 젊은 전문가 수는 2,00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수단 마련 필요)

러시아 철도청 대학 니키타 라코프(Nikita Racof) 부국장은 철도청에서의 청년 고용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청은 국내 최대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중 하나로 청년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준수하고자 하는 공기업이다. 라코프 부국장은 ‘러시아 철도청의 청년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 사내 적응시스템개발 및 직무적응 도움, 2) 자기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3) 기업과제 해결에 청년 참여 기회 제공, 4) 기업 봉사활동 및 건강한 생활 촉진, 5)철도교통 관련 분야 국제청년협력발전(‘14년과 ‘18년 한국 코레

일과 연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 정책의 체계적인 접근방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국 모두는 청년들을 능동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인식하고,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국의 협력은 한층 더 구체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성,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를 주제로 양국 간 공조와 연대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esic**
손옥이 전문위원

국제활동 ②

위원회,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국제노동기구(ILO)간 웨비나' 참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세계 사회적 대화의 역할에 공감



경사노위는 지난 3월 30일 국제노사정기구연합과 국제노동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코로나 19 회복을 위한 아시아 대륙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 웨비나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대화 사례에 대해 널리 홍보했다.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은 매년 총회 때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륙별 웨비나' 개최로 대신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사무총장, ILO 삼자주의국 국장, ILO남아시아사무소 사회적 대화 전문가, 러시아시빅챔버연합 대표단, 중국경제사회위원회 대표단, 베트남조국전선 대표단, 요르단경제사회위원회대표단, 경사노위 대표단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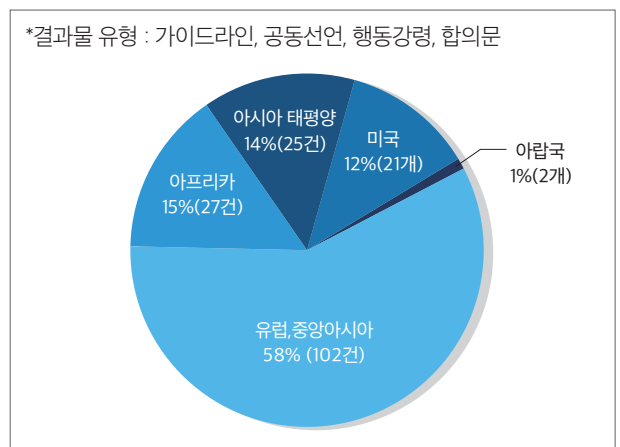
기조발제에서 ILO 유세프 갈렙(Youcef Ghellab) 삼자주의 국장은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도 기초근로시간은 8.8%로 단축되었고, 전세계 노동자 80%가 생업에 지장이 생겼으며, 특히 취약계층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

다"고 밝혔다. 또한 갈렙 국장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국가별로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국가 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위기 초반에 작동하여 경제사회 주체들의 역할을 원동력으로 코로나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34개 국가 중 75개 국가(약 40%)가 사회적 대화를 활용하였고, 177개(기업차원의 합의 제외)의 결과물(가이드라인, 공동선언, 행동강령, 합의문)이 도출되었으며 이중 23%가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 및 삼자주의의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 졌다.

- ▲ (결과물 분포도) 유럽 및 중앙아시아 58%, 아프리카 15%, 아시아 태평양 14%, 미국 12%, 아랍국가가 1%를 차지
- ▲ 20%는 영토적, 분야별, 기업 차원의 추가적인 사회적 대

<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 지역별 분포 >



< 사회적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을 한 아시아 국가 사례 >

국가명	사회적 대화 기구 및 형태	주요 대응 내용
싱가폴	삼자자문위원회	· 인력축소 대신 유연근무,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산업 및 노동자 보호 조치 시행 · 정부는 이행에 대한 점검도 시행
일본	일본 노총(RENGO)과 경총(KEIDANREN)	· 근무지속, 노동자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공동제안, 해고금지와 중소기업 정책, 정부의 지원 등 도모
방글라데시	국가삼자협의위원회	· 기업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 해고 금지 · 삼자 위기 대응을 위한 위원회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OSH)준수 모니터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네팔	중앙노동자문위원회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삼자주의 임시조직 설립
파키스탄	신드 주(州) 삼자위원회	·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미치는 문제점(급여, 휴가조정, 산업안전보건법)을 대응하기 위한 조치 마련
스리랑카	삼자임시조직	· 노사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조정을 포함 모든 분야에 적용가능한 합의를 도출
인도네시아	의류 및 신발 산업 노조와 경총 간의 사회적 대화 및 ILO의 지원	· 노동자 보호, 산업 지속성과 복지를 위한 내용의 공동 책무를 이끌어냄(20. 8)
필리핀	필리핀 노동부와 직장 내 코로나 예방과 통제를 위한 삼자 및 부문별 회의체	·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PHILHEALTH) 할증료 확대를 제한 · 보건 및 사회안전보장관련 삼자기구의 설립과 대표성 요구
한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양극화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등 코로나 19와 관련 총6개의 합의를 이룸 · 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공의료 확대 및 보건인력 보호를 위한 합의(20.3.18.)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20.7.28.)
중국	경제사회위원회	· 코로나19 관련 제언서를 발표함으로 ▲저소득층, 중소기업 대상 지원금 문제 ▲생산과 일자리 재개를 위해 필요한 대책 등에 정책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
러시아	러시아시빅챔버연합	· 코로나 19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포털사이트를 도입, 관련 자료를 게재 · 총 4,000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과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받아 900개 NGO단체에 제공

화를 제안, 23%는 기존 공적기구(삼자 노동위원회 또는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합의 도출

▲ 약 8%가 비정형노동자, 이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

마지막으로 유세프 국장은 “전 세계 노동시장이 일시적 회복 조짐이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하며 어떤 국가나 국민이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모두가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할 수 있고 경제 및 노동 시장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와 삼자주의를 기본으로 한 고용, 임금, 노동자의 권리,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회복 대책이 필요함”을 덧붙였다.

이어, 아시아국 사례발표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아시아 지역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LO남아시아 사무소 아룬 쿠마르(Arun Kumar) 사회적 대화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다.

아룬 사회적 대화 전문가는 “아시아 36개의 ILO 회원국 중 몇 국가는 사회적 대화를 경제, 노동 시장문제를 해결하

는데 활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접근과 경중이 다르며 사회적 대화의 과정과 성과에 있어 어떤 국가도 완벽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히며 “코로나 대응 시, 아시아 국가들의 대부분은 상부 주도의 임시 대화 및 협의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정책 방향설정과 노사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조기에 협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서 드러난 중요한 시사점은 아시아 각국별 경험과 성과공유를 통해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

사정 간 합의와 협약 자체가 중요한 의미라는 점이었다. 또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상호신뢰와 존중이 수반될 때 합의의 성공률이 높으며,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누가 옳은가’의 여부보다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기반으로 한 토론이 중요하다는 점이 공감대를 얻었다. 또한 협약의 체결보다 철저한 이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부각된 바 있다. **esic**

손옥이 전문위원

위원회 단신

관광산업위원회

운영기한 연장, 구조조정 상황 모니터링

관광산업위원회(위원장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가 올해 12월까지 회의체 운영기한을 연장하고 관광업계 구조조정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관광산업위는 '21.4.29.(목) 온라인 비대면 회의로 진행된 제14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와 본위원회에 회의체 연장안을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광산업위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고용위기에 처한 관광업계 주요 업종(호텔·면세점·여행사 등)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관광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6.19.(금) 정식 출범했다. 위원회 운영기한은 '21.6.18.(금)까지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관광업계 고용·경영위기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희망퇴직 형태의 ‘소리 없는 구조조정’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경영상 해고 등 노사갈등을 동반한 구조조정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경영계 위원인 정오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국제관광 재개를 비롯한 관광환경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1년간 힘들게 버텨 온 관광업체들이 휴·폐업에 돌입하는 등 한계에 몰려 있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노동계 위원인 조승원 관광·서비스노련 부위원장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본격화하기 전에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광산업위가 중재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위는 회의체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21.12.18.(토)) 관광산업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갈등 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취업을 모색하는 관광업종 노동자,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관광분야 전공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노광표 위원장은 “회의체 연장 여부를 두고 노사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관광산업 노사의 소통창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경사노위 관광산업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기능에 더해 갈등관리 창구로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희 전문위원



비정규직위원회

취약계층 조직화 지원 방안 논의

비정규직위원회는 20-21년 논의 의제 중 5번째 의제로 취약계층 조직화에 관한 사회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존 조직화 평가와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향후 취약계층 조직화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3회에 걸쳐 진행되는 논의에서, 우선 기존 취약계층 조직화 평가(4.12.)를 위해 이주환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 ‘한국 노동조합 조직화 실태의 평가와 제언’으로 발표했고, 문현군 위원장이 서울아산병원 사내하청 노동자, 코엑스 사내하청 노동자, 재외공관 행정직 노조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새로운 조직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4.26.) 청취를 위해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새로운 주체들의 조직화 메커니즘에 대해, 지민선 교수(미국 덴버대학교)가 취약계층 조직화 해외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3회 조직화 지원 방안 모색(5.10.)을 위해, 가사노동자협회, 대리운전협동조합 등의 신규 조직화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개선과제, 그리고 취약계층 조직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올 4월부터 5개월 간 진행되는 정책연구 “취약노동자 조직화의 사회적 지원 방안 연구”(책임 연구자 : 손정순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와 연계하여 구체화될 예정으로, 또한 21-22년 비정규직위원회 주요 의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비정규직위원회는 이어서 6번째 의제로 간접고용 규율, 사내하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에 관해 토론헌 계획이다.

손영우 전문위원



어선원고용노동환경 개선위원회

우선 해결 과제로 어선원 산재 저감 등에 공감대

작년 11월 13일에 발족한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이하 어선원위)는 논의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어선원위는 어선 규모 20톤을 기준으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보호 법체계는 20톤 이상은 선원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반면, 20톤 미만의 어선원들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행정체계 또한 해수부가 아닌 고용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원법으로의 일원화 논의를 추진하였으나 노사정간 큰 이견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견 속에서도 노사정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해야 하는 과제가 어선원의 산업재해를 저감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였다. 이에 노사정간 해결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큰 근로조건 및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를 하더라도 어선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3~4월에 추진한 검토 결과, 법 및 행정체계 상 ‘선원법 일원화’를 통해 어선원의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사항을 다루는 방안이 이상적이나, 노사 간 이견으로 ‘선원법 일원화’가 어렵다면, <어선안전조업법> 전부개정 방식이 차선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제3차 전체회의(21.3.26)에 공유하고 어선원위 위원 간 의견을 나누었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노사정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갈수록 그 방식에 대해 노사정간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 있는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현민 전문위원



위원회 인사 동정

안경덕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발령 (21.5.7.)